

민주당,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광주서 첫 공청회… 찬반 팽팽

개성공단 3차회담도 합의문 없이 종료

“중앙정치 예속화 방지” vs “정당 책임정치 실종”

민주당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회(위원장 김태일 영남대 정치학과 교수)는 15일 오후 2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와 관련한 지방순회 첫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이 폐지되면 책임정치가 실종되고 신인과 소수자들의 정치진입이 어려워진다는 주장과 중앙정치 예속화, 공천과정의 부작용 등 폐해가 심각하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팽팽히 맞섰다.

이날 정당공천 폐지 찬성 패널로는 광주동부 민주당 국회의원, 안평한 광주YMCA 사무총장, 임홍역 참여자치 21 지방자치위원장, 신인용 광주남구 의원이 나섰고, 반대측엔 황정아 전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회장, 탁영환 광주교대 정치학 외래교수, 임홍빈 전남도당 전국대의원, 문혜숙 광주북구의원이 참석했다.

폐지 찬성 측은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 공천과정에서의 비리와 부패 등 부작용 등을 정당공천제를 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저해 요인으로 규정하며 폐지 대안으로 ‘여성명부제’, ‘정당표방제’ 도입을 제시했다.

황정아 의원은 “공천제로 인해 생활정치, 풀뿌리 정치를 지향해야 할 기초의원들이 공천권을 편 국회의원들의 눈치만 보는 실정”이라며 “지난

10년 동안 공천제는 폐지 여론이 유지 여론보다 두 배 더 많았다. 국민의 여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안평한 YMCA 사무총장은 “여성명부제를 통해서 폐지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며 “공천제에 따른 정당의 책임을 운운하는데 보궐 선거 때 약 20억 원이 드는 선거비용을 정당이 대거나 공천제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나”고 지적했다.

폐지 반대 측은 후보에 대한 정당

의 책임 등 공천제의 순기능을 강조하며 폐지할 경우 정당의 책임축소, 지역토호들의 밸런스, 단합해야 할 지역 국회의원과 지자체 의원들의 소원한 관계 가능성 등을 우려했다.

황정아 전 여성회장은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유권자의 책임이 커지게 된다”며 “상대적으로 지역민의 관심이 낮은 기초의원선거에서 공천제는 유권자들에게 후보자들에 대한 기본 검증을 제공한다”고 역설했다.

탁영환 광주교대 교수는 “정당공천제는 영호남의 문제이자 전국적 구도에서 봤을 때 순기능을 하고 있다”며 “정당 민주주의가 존재하는 한 정당은 뜻이 맞는 후보를 출마해야 된다”고 밝혔다.

김태일 위원장은 “공천제 폐지에 대한 찬반 토론으로 많은 보완점들이 제시됐다”며 “당원들의 의견을 모아 폐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광주 공청회에 이어 16일

대전, 17일 부산, 18일 서울 등 4곳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뒤 전당원투표를 통해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에 대한 당의 의견을 정하기로 했다. 최근 1년 간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투표 자격을 갖는다. 이들 당원은 1만명 내외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전당원투표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이석현 의원을 임명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민주당 주최로 15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공청회에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새누리 ‘기초 정당공천제 폐지’ 민주 눈치보기?

“우리만 할 수 없는 것” 입장 애매 모호 논란

대선공약 불구 당론 여부 놓고 의견 엇갈려

새누리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입장은 모호하게 유지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당 지도부를 사이에서도 기초선

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당론 여부를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을 뿐 아니라 민주당의 논의 결과를 지켜보니 최종 입장을 밝히겠다는 생각

이어서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는 비

관을 받고 있다.

황우여 대표는 지난 9일 국회 출

입기자들과 간담회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이미 당론으로 폐지

를 정했다”며 “다만, 야당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한다”고도 했다.

반면, 최경환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기자들을 만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당론으로 결정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당론은 아닙니다”고 답했다. 이에 “당 대표는 당론이라고 말했다”고 묻자 최 원

내대표는 “대선공약이고 이미 재보궐선거에서 기초선거 무공천을 시행했다는 의미”라며 “제 말은 이번

에는 야당의 논의 결과에 따라 다시 당론을 결정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한 쪽만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하면 같이 하고 안하면 같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의 한 진진 의원도 15일 “민주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지 않았을 경우 우리만 시행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입장에 따라 새누리당의 태도로 바뀔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같은 새누리당의 애매한 입장은 당에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반대가 많은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신들만 무공천할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크

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또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점도 민주당의 상황을 주시하는 이유다.

문제는 민주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유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을 경우, 당내 반발을 끌어하고 당지도부가 폐지를 관찰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 때문에 당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당 지도부 사이에서는 폐지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정가에서는 황 대표가 박 대통령에게 당 내의 반대 분위기를 전했다가 역정을 들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다.

당 관계자는 “당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이 많다”며 “이는 반대 기류가 많으나 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 때문에 반대 목소리를 감히 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는 정당공천 폐지의 위험성 논란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양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 때문에 당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당 지도부 사이에서는 폐지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정가에서는 황 대표가 박 대통령에게 당 내의 반대 분위기를 전했다가 역정을 들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전당원투표를 통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부동산 성공 투자 하늘땅 공인중개사 가 함께합니다

상가건물

- ▷첨단 월계동 상가건물 매 28억(보2.8억/월1,600만)
- ▷첨단 중심상권 상가건물 18억, 21억, 30억 외 다수
- ▷월산동 일반상업지역 6층건물 매 14.5억(보2.8억/월810만)
- ▷지산동 5층 사무실 건물 16.5억(보2억/월800만)
- ▷동천동 공장·창고 임대 대 1300㎡, 건400㎡ 보2천 3백만

대지/전답

- ▷니주시 평생동 446-7 일대 배과수원 13,727㎡(4,150평) 미매가 협의
- ▷원도군 약산면 토지 3,160평(신축주택포함, 펜션등 디아트로 이용가)
- ▷장성군 서암면 추임리 토지 1,050평 1.8억(펜션 요양시설 적합)
- ▷장성군 삼계면 대지 외 4130㎡(1,250평) 1.7억
- ▷장흥군 정평면 전원주택 660㎡, 전 3,165㎡ 포함 3.5억
- ▷신성동 창고용지(생산녹지) 1980㎡(600평) 미매가 협의
- ▷수원시구 원룸부지 323㎡(98평)

기타

- ▷첨단 메인대로변 구분점포 150㎡ 매매8.5억
- ▷첨단 중심대로변 1층 상가 578㎡(175평) 임대 보10억 월1,200만
- ▷전남 나주시 문평면 국도1호변 주유소 7억
- ▷전남 소재 골프장 1,000㎡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문제 친절히 상담드립니다.

◎광주 전남권 매도 매수 물건 접수 환영합니다.◎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늘땅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5536-0382 Fax 062) 974-0449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주)다와우선컨설팅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상가 주택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상가 주택

- ▷동구 충장로 2호 중심상업 7층상가사무실 대지579㎡ 건평2929㎡ 김정가43억 최저가24억
- ▷광산구 운남동 2층주거 3층상가주택 대지221㎡ 건평 440㎡ 김정가15억 최저가3억5천만
- ▷광산구 신기동 3층상가주택 대지429㎡ 건평561㎡ 김정가16억9천만 최저가4억8천만

단독주택

- ▷서구 화정동 2층주거2층주택 대지159㎡ 건평184㎡ 김정가1억3천만 최저가1억천만
- ▷서구 화정동 2층신축주택 대지154㎡ 건평196㎡ 김정가1억6천만 최저가1억2천만
- ▷광산구 송정동 2층주거단독주택 대지252㎡ 건평131㎡ 김정가1억3천만 최저가1억9천만

공장 및 창고

- ▷광산구 지죽동 중공업지역2층공장 토지1914㎡ 건물 1379㎡ 김정가15억 최저가8억3천만
- ▷광산구 응동 일반공업 2층공장 토지3305㎡ 건물2711㎡ 김정가30억 최저가21억
- ▷담양군 칭평면 단층창고,사무실 토지3279㎡ 건물 1560㎡ 김정가14억7천만 최저가13억2천만

토지 매매

- ▷동구 내남동 1층주거 전원주택부지 주거환경최상 대지750㎡ 상당후 가격조정
- ▷무안군 해제면 덕산리 관리지역 전.임야 3642㎡ 매매3,500만

◎ 문의 010-4911-4989

(팩스 062-226-3607)

우리 정부는 3차회담에서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 대표단은 “개성공단을 왕래하는 우리 측 인원의 신변안전과 기업들의 투자자산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완비해야 한다”고 북한에 요구했다.

그러나 북한은 재발방지 등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 제시 없이 기존의 조속한 개성공단 재가동 입장만 주장하며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지방정부

시의회, 문화전당 특수법인 철회 건의안 채택

광주시의회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특수법인 변경계획안 철회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공공성이 강한 시설인 아시아문화전당의 특수법인화 계획에 반대한다”며 “설립 초기에는 정부조직인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으로 운영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정희곤 “학교 정수기 대장군 등 초과 검출”

정희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5일 “광주 지역 일선 초·중·고등학교에 설치된 정수기의 상당수가 먹는 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열린 제219회 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광주시교육청이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일선 학교 정수기 실태조사를 한 결과, 초등학교 6곳·중학교 6곳·고등학교 6곳 등 22개 학교에 설치된 정수기 62대에서 대장군·일반세균의 기준치를 초과해 철거·폐기했다”며 특히 A초교와 B초교, C중학교는 먹는 물 적합판정을 받은 지 3개월만에 부적합 판정이 내려져 철거되는 등 정수기 관리가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곳 등 22개 학교에 설치된 정수기 62대에서 대장군·일반세균의 기준치를 초과해 철거·폐기했다”며 특히 A초교와 B초교, C중학교는 먹는 물 적합판정을 받은 지 3개월만에 부적합 판정이 내려져 철거되는 등 정수기 관리가 부실화된다.

정 의원은 본회의 5분 발언 등을 통해 “이 택시업체는 북구청으로부터 올해 6월까지 일선 학교 정수기 실탏조사를 한 결과, 초등학교 6곳·중학교 6곳·고등학교 6곳 등 22개 학교에 설치된 정수기 62대에서 대장군·일반세균의 기준치를 초과해 철거·폐기했다”고 지적했다.

강은미 “광주시, 택시업체 불법도급 방지”

강은미 광주시의회는 15일 “광주시 택시업체가 불법도급 택시를 운행하도록 해 북구청으로부터 지난 5월 과대료를 부과받고도 현재까지 도급제를 배제으로 도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본회의 5분 발언 등을 통해 “이 택시업체는 북구청의 행정처분 후 도급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운전사들에게 도급제로 회귀를 종용하고, 임금까지

두 달째 체불하고 있다”면서 “힘들게 법을 지키는 노동자에게 임금을 차별하지 않으면서 다시 법을 어기도록 내몰고 있는데 광주시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저렴한 고급별장

정남진 장총, 드랑만 해변가 환상적인 드리리브